오바마 미국 신정부의 농업·농촌 정책방향과 시사점*

김 병 률, 이 명 기, 유 찬 희

오바마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은 크게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지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화와 도전, 꿈, 국익을 연상케 하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미국 4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의 농업·농촌 관련 정책방향은 크게 무역, 기후변화, 친환경, 가족농, 농촌개발, 복지 등 6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무역의 공정성 강화'와 '기후변화 적극 대응'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가축시설 규제 완화, 유기농업 육성, 재생에너지 육성 등 친환경 대책이다.

무역의 공정성 강화(Fight for Fair Trade)는 영문표기에서 나타나듯이 매우 도전적이다. 자국민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해외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무역정책을 펴고 WTO에 무역협정 이행을 압박해서 외국의 불공정한 정부보조금 중단과 미국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실패한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수입 증가를 초래한 북미자유협정(NAFTA)을 수정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아도 향후 다가올 무역정책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미 체결한 한·미 FTA도 미국에 불리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는 입장이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산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인 우리나라에 대하여 검역(SPS) 등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통상압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미국 신정부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이슈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수준으로 감축하고 경제 전

* 본 내용은 오바마 미국 신정부 정책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연구위원, 이명기 전문연구원, 유찬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brkim@krei.re.kr, 02-3299-4317)

반에 걸친 총량거래제를 실시하여 탄소배출량 범위 내에서 모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참여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과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므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축산사육시설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는 미국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유기농업 육성으로 유기가공식품이 급성장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시장에 유기식품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농촌을 재생에너지의 생산기지화하고 대체에너지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의 핵심부문으로 활용한다는 의도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농정으로서 우리 농업에서 한 수 배움직한 정책방향은 미국의 국본(國本)이라 할 수 있는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가족농의 확고한 존립기반 유지는 농업발전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에도 중요하다.

우리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농정으로서 우리 농업에서 한 수 배움직한 정책방향은 미국의 국본(國本)이라 할 수 있는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농촌지역의 농산물 공동판매조직과 농민소유 가공공장 등 소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활성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정책과 농촌학교의 우수교사 유치, 지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유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본고에서는 오마바의 농업·농촌·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 보장

가족농의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가족농에 대한 안전망 강화, 환경규제 강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가족농에 대한 안전망 강화

오바마는 가족농을 시장 상황의 변화와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농업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농가에 대한 농업 보조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불상한제(payment limitations)를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합병과 이에 따른 중규모 가족농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 보조금의 수혜 대상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대농보다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농에게로 전환하고자 한다.

농업 보조금이 25만 달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불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합병과 이에 따른 중규모 가족농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대규모 농가들이 경영체를 몇 개의 명목 기업(paper corporations)으로 분할하여 지급 제한을 피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경작자(active farmers)와 이들에게 농지를 임대한 지주 모두에게 지급 상한을 적용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다. 미 연방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과 지급제한위원회(Payment Limitation Commission, PLC) 모두 이러한 법의 허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가족농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육류 가공업체의 가축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시장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가족농과 개별 농업인들에게 시장에의 공정한 접근, 생산 결정권 및 투명한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가족농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인 행위들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예로, 육류 가공업체의 가축 소유를 금지함으로써 개별 생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아이오와 주 민주당 상원의원 Tom Harkin의 D-IA)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최근 육류 가공업체는 미국 돼지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그 비중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업체가 가축을 소유할 경우 개별 생산농가들의 수취가격이 낮아질 수 있고, 가격이 상승할 경우 개별농가로부터의 구입을 중단하여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The 1921 Packers and Stockyard Act"는 중소 생산농가에 대한 가격차별을 금지하였지만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는 부당한 가격차별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해당 법을 발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반독점법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 농업정책 개정으로 계열화된 농기업보다는 가족농 중심의 생산농가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재해 프로그램을 영구화시켜 안정적인 보호 장치를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족농 유지를 위하여 로컬푸드 운동("Buy Fresh, Buy Local")과 젊은 영농인 확보도 추진된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로 가족농 단위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젊은 영농인 세대 육성을 위해 전문기술을 익히고 농장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립대학 및 협동 지도 서비스가 4-H 및 미래농업인모임(Future Farmers of America, FFA)와 같은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 규제 강화

밀집형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환경 규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을 통해 농가들의 환경 보전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바마는 미국 전체 가축두수의 40% 이상을 사육하는 밀집형 가축사육시설(Concentrated Animal Feeding Operations, CAFO)에 대해 보다 강력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려 해 왔다. 한 예로 오바마는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하는 질소, 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공기와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규제 법안을 지지해 왔다. 오바마 집권 이후 환경보호청에서는 밀집형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단위의 실질적인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IP)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 보전 노력을 하는 농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왔다. 그러나 2002년 농업법에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 제한을 없애면서 밀집형 가축사육시설도 45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오바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주 오염원들에게 환경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오바마는 대기 오염과 농촌 지역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에서 약화시키려 했던 청정 대기법(the Clean Air Act)을 복원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토양 침식, 살충제, 비료 사용 등에 기인하는 표층수 오염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지 소유주들의 환경 보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전안보 프로그램(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과 보전유보 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 부산물을 이용한 메탄 소각기 사용 등을 장려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R&D 규모 확대도 환경 측면을 고려한 정책이다.

청정 대기법 복원, 보전안보 프로그램과 보전유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대기 및 물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토양 보전을 강화할 것이다.

식품안전성 제고

오바마는 미국 농무부와 식품의약청의 권한을 강화하여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알리고 리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Country of Origin Labelling Law)을 즉각 발효하여 육류 및 육류 제품에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국가 유기인증 비용분담 프로그램(National Organic Certification Cost-Share Program)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농무부 위험관리청의 작물 재해보험율을 조절하여 유기농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표시법을 즉각 발효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유기인증 비용분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한 밀의 28%, 옥수수의 20%, 대두의 35%를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R&D 지원 확대, 판촉 및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모든 무역협약에 높은 수준의 노동・환경・안전성 기준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 농촌 경제 발전 지원

농업 관련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 창출형 기업 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훈련 및 기술 지원, 세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업 관련 소규모 사업체 활성화와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농촌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자기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원료 농산물을 보다 큰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 즉 고부가가치 농업('value-added agriculture')은 농촌 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특히 옥수수를 이용한 청정 에탄올 생산은 루즈벨트 시대의 농장 프로그램 이후 가장 중요한 경제적 활동 중 하나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 프로그램(Value Added Producer Grant Program)을 통해 고부가가치 작물 및 축산물에 대한 협동마케팅과 농업인 소유의 가공공장과 같은 부가가치 창출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농촌 지역에 소규모 사업 및 소형 기업을 설립하여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의 소형 기업에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이 기업의 투자액에 대해서 20% 세액 공제(5만 달러 한도)도 제공한다.

농촌 지역의 상당한 토지들이 연방정부의 소유이다. 농촌 지역 카운티들은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로부터 재산세를 징수할 수 없는데, 이를 보상받기 위해 세금대체지급프로그램(The Payment in Lieu of Taxes(PILT) program)을 이용한다. 오바마는 지방 정부들이 PILT를 통해 세금징수 손실분을 공정하게 보상받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의 기간시설 확충도 중요한 과제이고, 현재의 정보·통신 정책이 농촌 지역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고려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에 통신 기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광역서비스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3.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에서 농촌 지역의 선도적 지위 확보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의 공급 확대를 지지해 왔고, 이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바마는 이전부터 재생가능한 연료의 공급 확대를 지지해 왔고, 농촌 지역이 이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배출권 총량거래(cap-and-trade permit auction) 수익의 일부를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개발과 확산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바이오연료 중 상당 부분을 생산·공급하고 과거보다 많은 풍력 에너지를 공급하는 농촌 지역 경제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다. 또한 국가 전역에 걸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경제 부문의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1]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든 정부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0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모든 연방정부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후 5년 이내에 40% 이상 높이겠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30년까지 경제 부문의 에너지 원단위(energy intensity)를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바이오연료 유통 기간시설 확대

오바마는 최초의 재생가능한 연료 기준(Renewable Fuel Standard)을 지지하였고, 이 기준은 현재 법제화되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 시절 최초로 재생가능한 디젤 기준(Renewable Diesel Standard) 도입을 통해 미국에서 생산한 바이오디젤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오바마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옥수수에서 생산하는 에탄올 등은 대표적인 대체에너지이나 현재 미국의 연료 공급량 중 차지하는 바이오연료 비중은 매우 작다. 미국의 연간 가솔린 소비량은 1,400억 갤런인데 비해서 연간 옥수수 에탄올 공급량은 50억 갤런에 불과하다. 옥수수 에탄올 생산을 확대하려면 휴경지를 옥수수 생산에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해 수자원과 농약 사용량이 늘어나서 환경부하가 증가한다. 또한 에탄올용 소비와 식용 및 사료용 소비와의 경합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 정부 계약 등을 통해서 2013년까지 차세대(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 공급량을 20억 갤런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발전된 바이오연료 기술의 전파를 위해 청정기술보급기금(Clean Technologies Deployment Venture Fund)을 활용할 것이다.

오바마는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세금 혜택, 정부 계약 등을 통해서 2013년까지 차세대(셀룰로스) 바이오에탄올 공급량을 20억 갤런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는 농촌 지역에 신규로 바이오에탄올 및 디젤 정제시설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 4천만 갤런 규모의 에탄올 정류시설을 도입하면 120명을 고용할 수 있고, 지방세원 규모를 연간 7천만 달러 확대할 수 있으며 그 지역 가구 전체의 연간 소득이 67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시설 도입에는 지방의 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 세금공제 프로그램 확대 적용, 기술적 지원, 지방 투자 비중이 25% 이상인 시설에서 생산한 에탄올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이 정책의 예이다.

1) GDP 1단위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비율로서 에너지 원단위는 "1차에너지 소비량/GDP"로 나타내며, 에너지 효율이 높을수록 에너지 원단위가 낮아진다.

관련 정책 및 제도 정비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 생산량을 최소 600억 갤런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연료 기준을 도입하여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 함량이 적은 연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 기준을 제안하는 등 바이오연료 공급 확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오바마는 재생가능한 연료 기준을 2022년까지 360억 갤런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을 의회가 승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2030년까지 바이오연료(차세대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포함) 생산량을 최소 600억 갤런으로 늘릴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국가 저탄소연료 기준(National Low Carbon Fuel Standard, LCFS)을 도입하여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 함량이 적은 연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국가 저탄소연료 기준이 적용될 경우 연료 공급자들은 2020년까지 연료의 탄소 배출량을 10%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바이오에탄올 등 대체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 부담 역시 경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바마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형 차량에 대해 기존의 연료 외에도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제와 청정기술보급 벤처펀드 마련을 통해 새로운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오바마가 구상하고 있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공급 의무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는 미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25%를 태양열, 풍력 등 청정에너지원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부문 투자가 촉진되고, 특히 농촌 지역의 고용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세금 공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련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청정기술보급 벤처펀드(a Crean Technologies Deployment Venture Capital Fund)를 마련할 것이다. 기존의 투자기금과 국립연구기관을 연계한 이 펀드는 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기능과 위험 분담 기능을 수행한다. 오바마는 향후 5년 동안 100억 달러의 투자를 실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재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농지 관리

오바마는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모든 국내 정책은 식재, 초지 회복 등 탄소 흡수 기능을 하는 농림업 종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삼림 조성이나 초지 유지, 무경운 농법 등이 활성화되면 탄소 흡수 외에도 수자원 관리와 야생동물 보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미국의 농촌 주민들은 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오바마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적정한 비용에 일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안정·유지·강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는 이를 위하여 '일반보건법(Universal Health Legislation)'을 법제화하여 국민들이 의료 부담 경감을 감소(보통 가구당 연간 최대 2,500달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농촌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소규모 기업들은 피고용자의 보험료 분담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국립건강보험 거래소(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여 소규모 기업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보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촌 지역 고령층 의료서비스 제도(medicare)와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도(medicaid)[2]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농촌 지역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 내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 2/3가 농촌 지역이다. 오바마는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금융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오바마는 지역보건센터(community health centers)의 건축 및 설립 지원을 위한 연방출자기금을 확대하고, 교통 관련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마지막 개선 사항은 보건정보기술 및 원격의료(Telemedicine)이다. 오바마는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자의료정보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시스템 도입은 농촌 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다.

의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지는 농촌 주민들을 위해 오바마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교육서비스 개선 및 젊은 인력 유치

오바마는 농촌 지역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고용 창출효과가 큰 시설인 공립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교사들은 각자 여러 학년의 다양한 과목 수업을 준비해야 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할 기회도

2) medicare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medicaid는 65세 미만의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료 보조 제도를 의미한다.

부족한 실정이다. 오바마는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교사 자격 인증 및 준비 과정을 개선하는 안을 발의했었고 이 안건은 상원을 통과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 근무 교사의 급여 인상, 성과 중심 평가 등으로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촌 지역 교육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농촌 활력증진 프로그램(Rural Revitalization Program)을 만들어 농촌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자 한다. 이 정책은 4년제 대학과 지역 대학, 지도·전파 서비스, 비영리 기관, 초등·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창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급식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 인력,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에서 식재료를 주문할 때 지역 농산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비중을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는 학생들의 비만을 감소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식품 시스템과 가족농을 지지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급식 프로그램에 필요한 식재료, 인력, 장비, 훈련 등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식재료를 주문할 때 지역 농산물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할 것이다.[3] 더불어 지원 대상이 되는 급식 프로그램을 점심 외에 아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토지 기금 대학들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농의 경쟁력과 소득을 높이고, 청장년에 대한 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대체 에너지 생산 체계와 효과적인 환경보전형 상품 생산 방식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자 한다.

고령층의 재정 안정성 및 건강 증진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함으로써 농촌 지역 고령층의 건강 증진 및 재정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농촌 지역의 고령화(59세 이상 인구 비중 20%)도 도시 지역(15%)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령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오바마는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농촌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소득 의존도는 비농촌 지역 주민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피고용인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오바마는 기업들이 법정 관리 신청을 하여 의무를 져버리지 못하도록 파산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오바마는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세제를 개편하여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모든 소득세를 폐지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약 700만 명의 고령층이 1인당 연간 1,4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고령층이 구입하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3) 현재 미국 농무부는 학교들이 입찰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을 주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농촌 기간시설 확충

오바마는 농촌 지역의 낙후된 기간 시설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곡물의 경우 운송비가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통 수단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는 도로와 교각 등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농촌 지역의 상하수도 시스템은 연방 정부 예산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예산이 삭감되면서 상하수도 관련 신규 프로젝트도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개선 역시 오바마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또한 미시시피와 일리노이 강의 댐 및 도크 같은 기간시설 현대화, 하천 상류 환경 보전을 위한 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개발 정책 자금의 효율적 집행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2001년 이후 미국 농무부가 집행한 농촌개발 정책 자금 규모는 700억 달러를 상회하지만, 이 중 '진짜' 농촌 지역을 위해 사용된 예산과 기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상당 부분은 부시 행정부가 보조 대신 융자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지역을 배제하여, 지원이 필요하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진짜' 농촌 지역이 정책 대상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농무부의 예산 규정을 합리화하여 민간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운송 수단 확대, 농촌 지역 상하수도 개선, 미시시피와 일리노이 강의 기간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촌 기간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농촌개발 정책 자금의 예산 규정을 합리화하여, 정책 자금이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촌 지역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과 한국의 대응, 2008.11.

삼성경제연구소,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2008.11.

Blueprint for Change: Obama and Biden's Plan for America at www.barakobama.com.

Real Leadership for Rural America at www.barakobama.com.